재 정 학

1. 목적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의 편익원칙에 기초한다.

② 특정분야 사업 재원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③ 전체 재정활동의 관점에서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의 목적세로는 종합부동산세를 들 수 있다.

⑤ 과세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선형누진세와 비선형누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높다.

② 비선형누진세는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이 동시에 변화한다.

③ 선형누진세는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이 변화하지 않는다.

④ 선형누진세는 비선형누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유리할 수도 있다.

⑤ 선형누진세는 면세점을 두고 있다.

3.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부과로 상대가격이 변화하고, 이로 인해 민간의 의사결정이 영향을 받음으로써 발생한다.

②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세를 중립세라 한다.

③ 세율이 높으면 초과부담이 줄어들지만 조세수입은 늘어난다.

④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은 커진다.

⑤ 초과부담은 대체효과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보상수요곡선으로 크기를 측정해야 한다.

4. 최적물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램지규칙은 주어진 조세수입 목표를 달성하는 가운데 초과부담을 최소화할 때 실현된다.

② 램지규칙에 따른 최적의 세율구조는 보상수요곡선을 전제로 한다.

③ 콜렛-헤이그(Corlett-Hague) 규칙은 해당 재화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차등적인 물품세를 부과해야 성립한다.

④ 역탄력성 규칙은 역진성을 초래하는 한계가 있다.

⑤ 램지규칙은 재화 간 조세수입의 한계초과부담을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도출된다.

5. 소득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형누진세의 경우 한계세율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② 세액공제는 한계세율을 인상시킨다.

③ 소득공제는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

④ 소득공제는 재화의 상대가격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⑤ 소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평적 공평성이 증진될 수 있다.

6.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에서 생산물 1단위당 300원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300원에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크기는? (단, 수요곡선: P = 6,000 - 4Q, 공급곡선: P = 2Q, P: 가격, Q: 수량)

① 50원 ② 100원 ③ 200원 ④ 250원 ⑤ 300원

7. 공평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편익원칙은 빅셀(K. Wicksell), 린달(E. Lindahl) 등에 의해 발전되었는데, 이들은 조세를 자발적 교환에 대한 대가로 파악한다.

② 수수료, 통행료, 사용료는 편익원칙에 따른 과세의 예이다.

③ 능력원칙에 따르면 상이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상이한 크기의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

④ 밀(J. Mill)은 공평과세의 원칙으로 동등희생설을 주장한다.

⑤ 사뮤엘슨(P. Samuelson)에 의하면 동등절대희생의 원칙은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에 누진과세를 정당화한다.

8. 알링햄-샌드모(M. Allingham and A. Sandmo)의 탈세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율 인상에 따른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② 탈세행위는 불법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세회피와 구별된다.

③ 탈세 방지 수단으로 적발 확률의 증가와 벌금 인상을 고려할 때, 행정비용 측면에서는 높은 벌금의 부과가 바람직하다.

④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 납세자를 가정한다.

⑤ 탈세행위는 수평적 공평성뿐 아니라 수직적 공평성에도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

9. 공공경비팽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바그너(A. Wagner)의 법칙이란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ㄴ. 피코크-와이즈만(A. Peacock and J. Wiseman)은 사회적 격변기에 정부지출 수준이 급속히 높아져 일정기간 유지되면, 추세선 자체가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를 전위효과(displacement effect)라고 불렀다.
ㄷ. 보몰(W. Baumol)은 노동집약적인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생산성 향상이 더디게 일어나기 때문에 경비가 팽창하게 된다고 보았다.
ㄹ. 부캐넌(J. Buchanan)은 특정 공공지출의 편익은 수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반면, 공공서비스의 공급비용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조세형태로 분산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공급비용을 과소평가한다고 설명하였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0. 부(-)의 소득세제에서, 한계세율을 t,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소득인 기초수당을 m이라고 할 때, 보조금은 $S = m - tE$ (단, E는 스스로 번 소득)이다. 부의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누진적 소득세제의 논리적 연장이다.
ㄴ. 소득세의 납부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형식을 취한다.
ㄷ. 어떤 사람이 스스로 벌어들인 소득이 m/t 이면, 보조금은 0(zero)이다.
ㄹ. 재분배효과는 m이 클수록 커진다.
ㅁ. t가 클수록 근로의욕이 커진다.

① ㄷ, ㅁ ② ㄱ, ㄴ, ㄷ ③ ㄴ, ㄹ, ㅁ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11.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초과부담은 세율이 높을수록 커지며, 노동공급의 탄력성이 낮을수록 커진다.
② 개인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은 대체효과가 클수록 증가한다.
③ 초과부담 측정은 임금률의 변화가 초래하는 소득효과를 제외한 보상된 노동공급곡선을 이용해야 한다.
④ 대체효과에 따른 노동공급 변화가 초래하는 후생 순손실을 의미한다.
⑤ 노동공급량 감소에 따른 노동공급자의 잉여 감소분에서 조세수입을 제외한 것이다.

12. 조세의 공평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경제적 능력 소유자의 조세부담은 같아야 한다.

② 수평적 공평성은 어떤 사람들을 똑같은 능력의 소유자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③ 납세 이후에도 개인의 효용수준의 순서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④ 소득세율의 누진성 강화는 수직적 공평성을 저해한다.

⑤ 포괄적 소득세는 수평적 공평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

13. 조세부과 기준으로서 경제적 능력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을 평가기준으로 할 경우, 여가와 노동에 대한 개인의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② 소비를 평가기준으로 할 경우, 누진과세가 불가능하다.

③ 소득을 평가기준으로 할 경우, 시장을 통하지 않고 취득된 귀속소득은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

④ 재산을 평가기준으로 할 경우, 재산 가치 평가의 어려움이 있다.

⑤ 소득을 평가기준으로 할 경우, 인플레이션 발생 시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증가한다.

14. 누진적 조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누진세율구조로 조세제도가 복잡해질 경우, 제도에 허점이 발생하여 수직적 공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

② 누진세율구조는 경제적 활력을 줄여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③ 누진세를 도입할 경우, 두 과세기간의 평균소득이 동일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사이에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④ 편익원칙에 따를 때, 편익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누진세의 도입은 공평하다.

⑤ 누진세율구조는 가처분 소득의 평준화를 통해 수직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15.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지원에서 제외되는 저소득근로자에게 생계비 등을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②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③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소득 1원 증가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분은 줄어드는 방식을 취한다.

④ 근로빈곤층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⑤ 개인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소득효과 없이 대체효과가 존재하여 노동공급은 소폭 줄어든다.

16. 공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전파경제학에서는 균형재정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공채발행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② 케인스경제학에서는 적자재정에 따른 공채발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③ 재원조달 측면에서 볼 때 '리카도(D. Ricardo)의 대등정리'가 적용되면 조세에 비해 공채발행으로 더 큰 총수요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④ '이용시 지불원칙(pay-as-you-use principle)'에 의하면 정부의 투자지출에는 공채발행이 바람직하다.

⑤ 공채발행은 그 목적과 달리 결과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17. 조세와 기업의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고전파 투자이론에 따르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적을수록 투자가 증가한다.

②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클수록 조세정책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③ 토빈의 q이론에 따를 경우, 자본의 대체비용이 클수록 투자가 줄어든다.

④ 자본의 사용자 비용과 관련된 한계실효세율 측정은 세전수익률을 세후수익률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다.

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가속상각 제도의 채택, 투자세액공제 허용 등이 있다.

18. 공공요금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한계비용가격설정은 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없다.

② 전기, 수도 등 사용재의 성격을 갖는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조세보다 공공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③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한계비용에 따라 가격을 설정한다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④ 램지가격설정방식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으나 분배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⑤ 공공요금 설정에서 분배적 측면을 고려한 낮은 가격책정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19. 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부문의 총지출 중 중앙정부의 직접적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중앙집권화율이라 하며, 분권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한다.

② 오우츠(W. Oates)는 공공재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지방공공재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③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는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있고, 인접 지역으로의 외부성이 없는 경우에 성립한다.

④ 티부(C. Tiebout)는 개인들의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롭다면, 개인들이 선호하는 지방정부를 선택하는 '발에 의한 투표'를 주장하였다.

⑤ 티부모형은 지방정부의 재원은 재산세로 충당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20.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떤 배분상태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그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 옮겨갈 때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해야 한다.

②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에서는 시장이 완전경쟁이라면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됨을 보여주는데,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달성됨을 의미한다.

③ 공공재는 그 특성상 가격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④ 중립세(neutral tax)를 제외한 조세부과는 자원배분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⑤ 도덕적 해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며, 자원배분 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21.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법인세 제도에서는 기업의 부채가 클수록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

② 모딜리아니-밀러(F. Modigliani and M. Miller)의 제1명제는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한 최적 자본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③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 법정 최고 세율은 25%이다.

④ 인플레이션에 의해 감가상각공제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면 법인세 부담이 가벼워진다.

⑤ 소득세와 법인세의 통합은 효율성뿐 아니라 공평성의 차원에서도 논의된다.

22.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n명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개인 i의 후생은 w_i, 사회후생은 W)

①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개인적 후생의 총합으로 나타내며 $W = w_1 + \cdots + w_n$가 된다.

② 앳킨슨(A. Atkinson)의 확장된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는 $W = \frac{1}{\alpha}\sum_{i=1}^{n} w_i^{\alpha}$로 표현되는데, 이는 α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개인후생의 합뿐만 아니라 분배에 의해서도 사회후생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③ 롤즈(J. Rawls)의 사회후생함수는 도덕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규범적 규율을 반영하는데, 이를 표현하면 $W = \min\{w_1, \cdots, w_n\}$로 나타낼 수 있다.

④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개인의 후생수준이 높을수록 더 작은 가중치를 적용한다.

⑤ 애로우(K. Arrow)는 합리적인 사회적 선호체계를 갖춘 사회후생함수가 존재함을 실증을 통해 입증했다.

23. 4가구(가 ~ 라)가 있는 마을에서 강을 건너기 위한 다리를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다. (가)는 다리를 건널 필요가 없는 농가이고, (나)는 다리를 이용하여 강 건너 직장에 출퇴근하여 500의 총편익을 얻는다. 다리 이용에 따른 (다)의 총편익은 $400 + 30M + 20M^3$이고 (라)의 총편익은 $300 + 70M + 30M^3$이다. 이때 다리의 총건설비용은 $3{,}850M + 700$이다. 다리의 적정 규모 M은? (단, M: 다리규모)

① 2 ② 3 ③ 4 ④ 5 ⑤ 6

24. 공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용체감산업의 경우 효율적 공급을 위해 규제를 해도 해당 민간 기업이 지속적으로 초과이윤을 얻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운영해야 한다.

② 비용체감산업을 공기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수입 확보가 주요 목적이다.

③ 산업이 대규모인 경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공기업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④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주인 - 대리인 문제'는 사라진다.

⑤ 공기업 민영화 요구의 경제학적 근거는 기존 비용체감산업의 성격이 변화된 데서 찾을 수 있다.

25. 마을 주민이면 누구나 방목할 수 있는 공동의 목초지가 있다. 송아지의 구입 가격은 200,000이고, 1년 후에 팔 수 있다. 마을 전체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방목 송아지 수(A)와 개별 주민 입장에서의 최적 방목 송아지 수(B)는? (단, 송아지의 1년 뒤 가격 $P = 1{,}600{,}000 - 50{,}000Q$, Q: 방목하는 송아지 수)

① A: 12, B: 12 ② A: 13, B: 16 ③ A: 14, B: 28

④ A: 15, B: 29 ⑤ A: 16, B: 30

26. 공공재의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경합성이란 소비자의 추가적인 소비에 따른 한계비용은 0(zero)이 됨을 의미한다.

② 순수 공공재는 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동시에 충족한다.

③ 대부분 공공재는 순수 공공재로 볼 수 있으며, 시장이 성립하지 못한다.

④ 클럽재는 배제성 적용이 불가능하다.

⑤ 공공재의 소비자들은 자신의 수요를 정확하게 표출한다.

27. 공공재의 수요표출 메커니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요표출 메커니즘의 궁극적 목적은 파레토 효율적 자원배분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ㄴ. 클라크 조세(Clarke tax)의 핵심은 개인이 부담할 세금의 크기와 표출한 선호 간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ㄷ. 클라크 조세에서 개인은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는 것이 우월전략이다.
ㄹ. 클라크 조세에서 어떤 소비자가 부담할 세금은 자신이 표출한 선호가 아니라 다른 소비자들이 표출한 선호에 의해 결정된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8. 갑, 을, 병 세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에 공공재를 공급하고자 한다. 공공재의 총공급 비용은 TC = 36Q이며, 갑, 을, 병 각각의 수요함수는 Q = 30 - P, Q = 35 - P/2, Q = 40 - P/4 이다. 공공재 공급비용을 각자 균등하게 부담할 때, 꽁도세(Condorcet) 방식에 의한 공공재 공급량은? (단, Q: 수량, P: 가격)

① 29 ② 30 ③ 32 ④ 35 ⑤ 37

29. 관료제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니스카넨(W. Niskanen) 모형에서 관료제 조직은 가격순응자와 같이 행동한다.

② 니스카넨 모형과 미그-빌레인저(Migue-Belanger) 모형에서는 공익추구를 기본 가정으로 한다.

③ 니스카넨 모형에서 관료는 예산의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예산규모를 늘린다.

④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니스카넨 모형에 따른 공공재의 초과공급은 미그-빌레인저 모형에 따를 때의 초과공급보다 적다.

⑤ 니스카넨 모형에서 관료제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생산과 공급활동은 민간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비용만 부담하는 방법이 있다.

30. 투표자들의 선호 강도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거부권투표제	ㄴ. 보다(Borda)투표제	ㄷ. 점수투표제
ㄹ. 투표거래(logrolling)	ㅁ. 만장일치제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31.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경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유 사용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증가하여 국민건강을 해친다면, 이는 외부경제효과이다.

② 경유 소비에 대해 토빈세(Tobin tax)를 부과하면 대기오염을 감축시킬 수 있다.

③ 대기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경유 소비는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과소하다.

④ 외부효과를 상쇄하는 조세의 크기는 바람직한 경유 소비량 수준에서의 한계피해액만큼이어야 한다.

⑤ 조세부과를 통해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는 있지만, 자원배분의 효율을 달성하기 어렵다.

32. 강 상류에서 가축을 기르는 축산농가와 하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민들 간에 상류의 가축분뇨 방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음 중 외부성을 해결하는 타당한 방안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강물에 대한 소유권을 설정한다.
ㄴ. 오염배출권을 발행하여 거래한다.
ㄷ. 축산농가에 대해 환경세를 부과한다.
ㄹ. 가축분뇨 방류로 인한 수질 오염 허용치를 설정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33. 강 상류에서 우유를 생산하는 목장이 있다. 이 목장의 우유 1ℓ의 한계비용은 MC = 100 + Q이고, 수요곡선은 P = 1,300 − 10Q이다. 목장의 축산폐수가 하류지역에 피해를 유발하는데, 그 한계피해는 MD = Q이다. 경쟁적인 우유시장에서 정부가 교정조세(corrective tax)를 부과할 경우 옳지 않은 것은? (단, P: 가격, Q: 수량)

① 사회적 최적생산량은 100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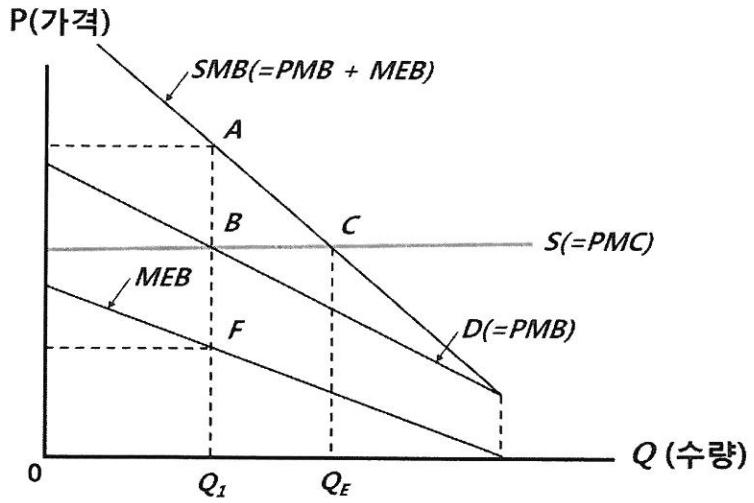
② 사회적 최적생산량 수준에서의 가격은 300이다.

③ 사회적 최적생산량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위당 100의 교정조세를 부과해야 한다.

④ 교정조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과다 생산될 여지가 있다.

⑤ 교정조세를 부과할 때 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frac{1,200}{11}\ell$이다.

34. 외부편익이 존재하는 경우를 나타낸 아래 그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개수는? (단, D: 수요곡선, PMB: 사적 한계편익, S: 공급곡선, PMC: 사적 한계비용, MEB: 한계외부편익, SMB: 사회적 한계편익)



- ㅇ 이 그림은 재화의 소비에 외부편익이 존재하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 ㅇ 시장균형은 $PMB = PMC$가 성립하는 점 B에서 달성되는데, 이때의 생산량은 $SMB > PMC$가 되므로 사회적으로는 과소하다.
- ㅇ 시장균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비용의 크기는 삼각형 ABC에 해당한다.
- ㅇ 시장균형에서는 생산량을 변화시키려는 경쟁적 힘이 작용한다.
- ㅇ 생산량을 Q_E로 증가시킴에 따른 사회적 순이득(net gain)은 삼각형 ABC와 같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35. 소득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위 20%의 소득이 서로 같은 A, B국이 있을 때, A국의 10분위분배율이 1/2이고 B국의 5분위배율이 2라면, 하위 20%의 소득은 A국이 B국보다 크다.

② 지니계수는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③ 사회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할수록, 해당 사회에 대한 앳킨슨 지수(Atkinson index)는 높게 나타난다.

④ 조세 체계의 누진성을 강화하면 5분위배율은 하락한다.

⑤ 소득이 완벽히 평준화된 사회에서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이 된다.

36.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국내에 거주하는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②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은 별도의 연금제도에 가입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에도 동시 가입이 가능하다.

③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적립방식을 취하는데, 납부된 보험료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과 운용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④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는데,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5.0 % 이다.

⑤ 국민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은퇴효과와 상속효과는 자발적인 저축을 감소시킨다.

37. 소득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다.

② 소득세의 누진세율제도는 소득 계층 간 가처분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③ 사회보험제도는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만, 그리고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세금을 납부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

④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지원을 위한 제도이다.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38. 정부가 사회보험을 도입하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역선택 문제 때문
②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③ 온정주의(paternalism) 때문
④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⑤ 소득재분배를 위해

39. 경제안정을 위한 재정의 총수요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수요관리를 위한 재정정책의 유형으로는 자동안정장치(built-in stabilizer), 공식에 의한 신축성(formular flexibility), 재량적 재정정책(discretionary fiscal policy) 등이 있다.

② 자동안정장치의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는 누진세제도와 실업보험제도 등이 있다.

③ 자동안정장치는 시차문제에서 재량적 재정정책에 비해 더 나은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④ 재량적 재정정책은 자동안정장치에 비해 총수요관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⑤ 자동안정장치는 불황기일 경우 재정긴축, 호황기일 경우 재정확장으로 작동된다.

40.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용편익분석의 이론적 기반은 파레토 보상기준이다.

② 현재가치법을 사용할 경우, 할인율이 낮을수록 장기사업보다 단기사업이 유리하다.

③ 현재가치법은 총편익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④ 편익-비용비율법의 경우 그 값이 작을수록 우선순위가 올라간다.

⑤ 내부수익률은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세법학개론

41.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ㄴ.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ㄷ.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ㄹ.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 납부일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2.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다음 중 「국세기본법」 규정이 세법 규정에 항상 우선하는 것은?

① 기한 후 신고 ②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③ 물적납세의무
④ 연대납세의무 ⑤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43.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 중 '장부등의 보관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 없이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③ 납세자등은 조사목적이나 조사범위와 관련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일시 보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장부등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에게 일시 보관할 장부등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어떠한 사유로도 해당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

④ 세무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나,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의 반환을 납세자가 요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등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44.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과 관련한 법정기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는 소득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②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③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④ 「국세징수법」상 납기전징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45.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중지·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을 등기한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며,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체납처분 유예기간 이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도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46.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② 압류 또는 압류 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③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 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하나, 압류조서에 영수 사실을 적고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⑤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47.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중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이 질권(質權)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에게 문서로써 해당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권의 설정 시기가 법정기일 전이면 질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④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收入)할 금액에 미친다.

⑤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아니한 천연과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48. <국세징수법> 다음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설명이다.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公益)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 1. 체납 발생일부터 (ㄱ)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ㄴ)만원 이상인 자
> 2. 1년에 (ㄷ)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ㄹ)만원 이상인 자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
①	1	500	2	500	②	1	500	3	500
③	1	1,000	2	1,000	④	2	500	3	500
⑤	2	1,000	2	1,000					

49.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 것은?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②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

③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 타인이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

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50.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 )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①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② 재산의 은닉

③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④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⑤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

51. <소득세법> 거주자 甲의 2019년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관련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甲의 2019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단, 자료에 언급된 것 이외에는 모두 적법하게 원천징수되었고, 모든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다.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1) 乙에게서 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13,000,000원(원천징수되지 아니함)**
> **(2) 주권상장법인 (주)A로부터 받은 현금배당금: 5,000,000원**
> **(3) 비상장내국법인인 (주)B가 자기주식소각이익을 2019.5.1. 자본전입 결의하고, 그에 따라 2019.7.1. 甲에게 무상주를 교부하였음. 세법상 수입시기 현재 甲이 교부받은 무상주의 액면가액은 3,000,000원이고, 시가는 6,000,000원임. 주식소각일은 2016.1.5.이며, 소각 당시 자기주식의 시가는 취득가액을 초과함.**

① 18,000,000원 ② 21,110,000원 ③ 21,550,000원 ④ 21,880,000원 ⑤ 24,000,000원

52. <소득세법> 거주자 甲은 2019.6.30.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를, 건물은 300,000천원, 토지는 200,000천원으로 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닌 乙에게 일괄 양도하였다. 이 경우 건물의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1. 실지거래금액 및 감정평가가액(아래 기재된 가액 이외의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가액 등은 없다고 가정함) (단위: 천원)

구분	건물	토지	비고
계약서상 양도금액	300,000	200,000	
취득시 취득가액	120,000	180,000	2016.1.1. 취득
양도시 감정평가가액	150,000	250,000	

2. 건물은 정액법(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없음)으로 월할 상각하여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3. 甲은 취득시 건물과 토지 모두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	건물	토지	비고
양도시점	120,000	200,000	
취득시점	80,000	120,000	

4. 양도시 양도계약서 작성비용: 4,000천원
5. 건물 취득일에 완료한 외벽의 도색 비용: 5,000천원

① 104,750천원 ② 105,500천원 ③ 108,000천원 ④ 164,250천원 ⑤ 220,500천원

53. <소득세법, 법인세법> 다음은 식기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인 A의 2019.1.1.~12.31.의 자료이다. A가 ㉠ 개인(복식부기의무자임)일 경우의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액과, ㉡ 법인(사업연도는 역년과 같고, 사회적기업이 아님)일 경우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단, A에게는 다른 소득은 없으며 기부는 A가 직접하였고 모든 증빙을 갖추었다고 가정한다.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전이며,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기 전의 금액): 170,000,000원 (2) 종교단체기부금: 5,000,000원 (3) 실비로 이용가능한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특수관계인 아님)에 대한 금전 외 자산 기부금: 장부가액 20,000,000원, 시가 35,000,000원 (4) 장애인유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 30,000,000원 (5) 직전 과세기간(2018.1.1.~12.31.)에 발생한 세무상 이월결손금: 20,000,000원

① ㉠ 25,000,000원 ㉡ 30,000,000원 ② ㉠ 25,000,000원 ㉡ 40,000,000원

③ ㉠ 25,000,000원 ㉡ 55,000,000원 ④ ㉠ 30,000,000원 ㉡ 40,000,000원

⑤ ㉠ 30,000,000원 ㉡ 55,000,000원

54. <소득세법>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甲의 2019년도 종합소득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소득공제의 종합한도나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소득공제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자료 이외에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사유는 없음)

(1) 본인 및 가족현황(소득현황란에 기재된 소득 이외의 소득은 없음)

구분	연령	소득현황	비고
본인	51세	총급여액 60,000,000원	무주택자이고 부녀자 아님
배우자	47세	총급여액 4,000,000원의 근로소득	별거중임
부친	80세	사업소득금액 10,000,000원	
모친	75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000,000원	2019.2.8. 사망
장녀	21세	소득금액 합계액 2,000,000원	장애인
장남	18세	소득 없음	장애인
※ 가족들은 모두 甲과 생계를 같이 한다.			

(2) 기타 甲이 지출하였거나 甲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부담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3,600,000원 (본인 부담분 1,800,000원, 회사 부담분 1,800,000원)

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 1,000,000원 (본인 부담분 500,000원, 회사 부담분 500,000원)

다. 생명보험 보험료 1,000,000원

① 11,300,000원 ② 12,300,000원 ③ 12,348,000원 ④ 13,600,000원 ⑤ 14,800,000원

55.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 및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③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가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④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100%를 간접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당해 내국법인의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외국의 국적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56.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이 2019년에 (주)A에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급여 등에 관련된 자료이다. 거주자 甲의 2019년 총급여액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연간 급여 합계액(30,000,000원)
(2) 연간 상여 합계액(10,000,000원)
(3) 상여 소득처분금액(2,000,000원): (주)A는 2019.3.20.에 2018.1.1.~12.31. 기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익금산입한 금액 중 2,000,000원을 甲을 귀속자로 하는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4) 연간 급여 및 상여 외의 甲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이익(10,000,000원): 주식매수선택권은 (주)A의 100% 모회사인 (주)B 발행 주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2019.5.5.행사하였다. (주)A 및 (주)B는 모두 벤처기업이 아니다.
(5) 연간 급여 외의 식대(2,400,000원): (주)A는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식대를 월 200,000원씩 금전으로 지급하고 있다.

① 41,200,000원 ② 48,800,000원 ③ 51,200,000원 ④ 53,200,000원 ⑤ 54,400,000원

57. <소득세법> 법인의 대표자(등기임원)인 대주주가 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을 횡령하면서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매출을 일부 누락시켰으나, 이후 과세관청이 그 관련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당해 내용에는 소득금액 변동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② 해당 사안의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법인 소재지가 분명하고, 송달할 수 있는 경우라면, 소득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득세법」은 횡령에 의하여 취득하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⑤ 해당 사안의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8.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에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이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② 10년 이상 보유한 서화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 최소한 당해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정신적 피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한다.

④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⑤ 특정한 소득이 기타소득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액에 영향이 없다.

59.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이 아닌 것은?

① 사업소득 중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1,50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사업소득 중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③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④ 기타소득 중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60.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한 부동산의 처분은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토지나 건물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④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⑤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담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양도한 것으로 본다.

61.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보험료(원천징수대상 아님)로서 해당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③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④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고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⑤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 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62. <법인세법> 비상장 영리내국법인인 (주)A와 (주)B의 자료를 이용하여 보통주 소각으로 인한 (주)A의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식 취득과 소각은 적법하였고, (주)B는 과거 합병사실이 없다.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주)A는 제19기(2019.1.1.~12.31.) 초 현재 (주)B의 보통주 600주(1주당 액면금액 1,000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통주 관련 거래는 다음과 같다.
- ㅇ (주)A는 2016.4.1. (주)B의 보통주 400주를 1주당 시가인 1,500원에 취득하였음
- ㅇ (주)A는 2017.5.2. (주)B가 주식발행초과금(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이 아님)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보통주 200주를 무상으로 취득하였음
- ㅇ (주)A는 2017.7.1. (주)B가 법인세가 이미 과세된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보통주 400주를 무상으로 취득하였음
- ㅇ (주)A는 2017.9.15. 보유중인 (주)B의 보통주 400주를 유상으로 처분하였음

(2) (주)B는 2019.3.31. 보통주를 1주당 1,500원에 소각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A가 보유한 (주)B의 보통주 400주가 소각되었다.

① 200,000원 ② 250,000원 ③ 400,000원 ④ 450,000원 ⑤ 600,000원

63.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②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③ 법인이 접대비를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

④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경조금은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귀속자에 관계없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64. <법인세법>「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부당행위계산에 있어서의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③ 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④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의 경우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으면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⑤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65. <법인세법> 내국법인 (주)A가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행하는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험기기 1,000,000원과 가스기기 1,500,000원을 한 거래처에서 구입하면서 2,500,000원을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세법상 모두 손금으로 인정된다.

② 개인용 컴퓨터 2,000,000원과 전기기구 2,500,000원을 한 거래처에서 구입하면서 4,500,000원을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세법상 모두 손금으로 인정된다.

③ 시설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④ 2년 전에 업무용 승용차의 타이어를 교체한 후 2019년 4월 1일 다시 전체적으로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하여 지출한 600,000원은 수익적지출에 해당된다.

⑤ 재무상태표상 직전사업연도 장부금액이 60,000,000원인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지출액 5,000,000원을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5,000,000원은 (주)A가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의제하여 시부인한다.

66. <법인세법>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대손충당금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19기(2019.1.1.~12.31.) 세무조정 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금액은 얼마인가? (단, 전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였고,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대손충당금 변동

가. 회사계상 대손충당금 내역

기초잔액	당기 상계액(감소)	당기 설정액(증가)	기말잔액
20,000원	10,000원	16,000원	26,000원

나. 당기 상계액 10,000원 중 4,000원은 거래처의 파산으로 회수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매출채권금액이며, 나머지 6,000원은 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지만 회사가 미수금에 대해 조기에 회수불능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였음

다. 대손충당금 기초잔액 20,000원 중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3,000원이다.

구분	당기 말	전기 말
매출채권	260,000원	160,000원
미 수 금	100,000원	40,000원
선 급 금	40,000원	-
구상채권	6,000원	-

(2) 회사계상 기말 자산 내역 중 일부

가. 전기 말 채권 중 대손부인된 채권은 없음

나. 미수금은 비품 처분과 관련된 것임

다. 자회사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임

① 14,760원 ② 14,880원 ③ 20,880원 ④ 21,050원 ⑤ 21,120원

67.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연결납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내국법인인 완전모법인과 그 다른 내국법인인 완전자법인은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은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ㄷ. 같은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법인 간 균등하게 배분하여 결손금 공제를 할 수 있다.
ㄹ.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연결법인은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ㅁ. 각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해당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연결중간예납세액을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68. <법인세법> 다음은 주권상장 내국법인 (주)A의 제19기(2019.1.1.~12.31.) 자료이다. 관련된 세무조정을 소득처분별로 합계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는 적정하였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주)A는 2019년 초 (주)B의 주식을 20,000원에 취득하여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고, 제19기 말 공정가치인 25,000원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5,000원 (대) 금융자산평가이익 5,000원

(2) (주)A는 2019.11.1. (주)C의 회사채(액면 10,000원)를 만기보유목적으로 8,000원에 취득하였고, 제19기 말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200원 (대) 이자수익 200원

① 세무조정 없음

②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5,000원(유보)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5,200원(△유보)

③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5,000원(유보)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200원(△유보)

④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10,000원(기타)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200원(△유보)

⑤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5,000원(기타)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5,200원(△유보)

69. <법인세법>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19기(2019.1.1.~12.31.) 감가상각과 관련된 자료이다. 관련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였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기계장치 취득가액: 50,000,000원
(2) 기계장치 취득일: 2017.1.1.
(3) 감가상각방법 및 상각률: 정률법(상각률 : 0.45)
(4) 감가상각비 장부상 계상금액
  ○ 2017년 : 25,000,000원
  ○ 2018년 : 10,000,000원
  ○ 2019년 : 6,500,000원

① 세무조정 없음
②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125,000원(△유보)
③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306,250원(유보)
④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306,250원(△유보)
⑤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250,000원(△유보)

70. <법인세법> (주)A는 (주)B를 흡수합병하고 2019.3.10. 합병등기를 하였다. 두 법인은 모두 영리내국법인으로 사업연도는 제19기(2019.1.1.~12.31.)이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 비적격합병이라 가정할 때의 (주)B의 양도손익에서 ㉡ 적격합병이라 가정할 때의 (주)B의 양도손익을 차감하면 얼마인가? (단, 전기 이전의 세무조정은 적정하였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합병등기일 현재 (주)B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재무상태표

건물	150,000원	부채	100,000원
		자본금	30,000원
		자본잉여금	15,000원
		이익잉여금	5,000원
	150,000원		150,000원

(2) 합병등기일 현재 (주)B의 건물의 시가는 250,000원이었고, (주)A는 (주)B의 구주주에게 현금 15,000원과 주식(액면가액 75,000원, 시가 135,000원)을 교부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건물	250,000원	(대) 부채	100,000원
		자본금	75,000원
		주식발행초과금	60,000원
		현금	15,000원

① 0원 ② 50,000원 ③ 100,000원 ④ 150,000원 ⑤ 200,000원

71. <부가가치세법> 2019년도에 발생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A(제조 및 수출 영위)의 2019년 제1기 과세기간(2019.1.1.~6.30.)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금액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의 경우 적용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1월 1일 국내거래처에 AA제품을 20,000,000원에 장기할부로 매출하고 대금회수는 매년말 10,000,000원씩 2년 동안 회수하기로 하였다. 회사는 현재가치로 매출 17,355,400원과 현재가치할인차금 2,644,600원을 인식하였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867,770원이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는 발행된다.

(2) 2월 2일 국내거래처에 그 동안 실적에 따라 장려금 300,000원과 BB제품(원가 1,000,000원, 시가 1,500,000원)을 장려품으로 지급하였다.

(3) 2018년 8월 10일에 국내거래처에 대하여 발생했던 매출채권을 2019년 3월 3일에 조기에 전액 회수하면서 매출채권의 10%에 해당하는 200,000원에 대해 매출할인을 실시하였다.

(4) 4월 4일 미국거래처에 CC제품을 수출하고 대금 $1,000는 4월 10일에 수령하였으며 환전은 4월 12일에 하였다. 일자별 1달러 당 환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4월 4일	4월 10일	4월 12일
기준환율	1,000원	1,010원	1,020원

① 1,800,000원 ② 2,000,000원 ③ 2,300,000원 ④ 2,320,000원 ⑤ 2,500,000원

72. <부가가치세법> 문구 소매업과 의류 제조업을 겸영하고 있는 간이과세자인 甲의 2019년 과세기간(2019.1.1.~12.31.)의 거래내역이다.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차가감납부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얼마인가? (단, 모두 국내거래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공급 내역
① 소매업분: 공급대가 20,000,000원
② 제조업분: 공급대가 30,000,000원
③ 비품: 공급대가 10,000,000원(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음)
(2) 매입 내역
① 소매업분: 공급가액 15,000,000원, 매입세액 1,500,000원
② 제조업분: 공급가액 5,000,000원, 매입세액 500,000원
③ 업종별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분: 공급가액 3,000,000원, 매입세액 300,000원
(3) 업종별 부가가치율
① 업종별로 5%, 10%, 20%, 30%를 적용함
② 소매업의 경우 10%, 제조업의 경우 20%임
(4)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하였다.

① 548,000원 ② 620,000원 ③ 662,000원 ④ 695,000원 ⑤ 705,000원

73.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기환급의 경우 환급세액은 조기환급 관련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② 일반과세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환급규정이 적용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세액을 조기환급할 수 있다.

④ 사업자가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조기환급은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한해 받을 수 있다.

⑤ 조기환급이 아닌 경우의 환급세액은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74. <부가가치세법>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甲의 2019년 제1기 과세기간(2019.1.1.~6.30.)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모두 국내거래이고,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아래의 자료를 제외한 세무상 처리는 모두 적정하였음)

거래일자	거래내용	금액
4.11.	A제품을 乙에게 외상으로 공급함(대금은 2019.7.10.에 수령함)	10,000,000원
5.20.	대가를 받지 않고 丙에게 A제품을 견본품으로 제공함	시가 100,000원 원가 60,000원
6.17.	A제품을 직원의 생일축하선물로 제공함	시가 150,000원 원가 80,000원
6.26.	일주일 안으로 서면이나 구두로 매입동의 여부를 알려주기로 하고 시제품을 丁에게 인도함(2019.7.1. 상대방이 구두로 매입의사를 밝힘)	700,000원
6.27.	A제품을 戊에게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戊가 일방적으로 이를 해제함에 따라 위약금으로 받은 금액	200,000원

① 10,000,000원 ② 10,080,000원 ③ 10,150,000원 ④ 10,350,000원 ⑤ 10,990,000원

75.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

②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

③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로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④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⑤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경우

76.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소유재화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ㄴ. 외상매출채권의 양도
ㄷ.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용 건물의 분할등기(출자지분의 현물반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ㄹ.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
ㅁ.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것
ㅂ.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 관계가 없이 잔여 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으로서 받는 이주보상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77.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한다.

②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③ 광업의 경우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되,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광업 원부의 맨 처음에 등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조업의 경우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 5에 따른 저유소(貯油所)는 사업장에서 제외한다.

⑤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하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한다.

78.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상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경우(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짐) 영세율 적용이 된다.

② 수출용 완제품을 공급한 후라도 내국신용장이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③ 국내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해외에서 도로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외화로 대금을 수령할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④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 때, 외국항행용역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았다)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7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권한 있는 당국이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③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④ 정상가격의 산출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동등한 입장에서 적용하여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⑤ 과세당국은 정상가격 적용 시,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8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상호합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지만 체약상대국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

② 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 상호 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국세기본법」의 불복청구기간과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 징수유예와 체납처분유예는 국제관행이 상호합의절차의 진행 중에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④ 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 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종료되거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⑤ 과세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 경정결정 기타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상호합의절차 종결 후 그 상호합의 결과와 다른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